

“지속가능 해외도시 건설 참여 지원”

김윤덕 국토부장관, 사우디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 행사 국내 수주 지원단장으로 참석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Cityscape Global 2025’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 행사에 수주지원단 대한민국 단장으로 참석한다.

이번 김 단장을 대표로 한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Cityscape Global 2025’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다. 시티스케이프 글로벌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지원 활동도 펼치게 된다.

김 장관을 비롯한 수주지원단은 17일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문제 해소를 위한 설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아(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등 K-아파트 만의 특징점을 적극 홍보해 K-주거공간 기술이 세계 각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km) 차량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 및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면

담 외에도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는 디리야(Diriyah), 키디아(Qiddiya), 알 푸르산(Al Pursan) 등 현장을 찾아 사우디 신도시 개발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지 진출기업들과의 기업간담회도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기업의 수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라며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도의회 문안위, 소리축제조직위 행정사무감사

“계약 등 전면 재정비 필요하다”

운영 구조 · 조직문화 등 전반적인 문제 지적,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7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위원회의 운영 구조와 계약 집행, 인사 체계, 조직문화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부족 △수의계약 급증과 낙찰률 100% 관행 △조직위원장의 폭언 논란 △급여체계 불합리 및 경력자 이탈 △의사결정의 소수 독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소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명목상 상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제로는 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문화국장 등 극히 일부의 인물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정책과 예산이 특정 소수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는 견제 기능이 완전히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보수 체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임금 인상안조차 행정팀장이 서류만 올리면 집행위원장의 서명으로 처리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수의계약 집

행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은 2023년 42건(약 7.9억원), 2024년 30건(약 5.7억원), 2025년 61건(약 9.5억원)으로 2025년에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계약이 낙찰률 100%로 체결되었고, 일부는 기준을 넘어서는 100% 초과 낙찰률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과 전북자치도 자체 기준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현장에서 불거진 조직위원장의 폭언 논란을 도마 위에 올렸다.

당시 조직위원장은 공연 현장에서 직원에게 모욕적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퇴장을 둘러싼 조직위원장 가족과 안내원 간 실랑이가 벌어져 주변 관객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바 있다.

김경기 의원(부안)은 조직 내 급여체계의 불합리성과 경력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축제 전문성과 지속성에 큰 타격을 준다고 언급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상임위원회 운영의 폐쇄성과 소수 중심적 구조를 다시 한번 비판하며 “축제 발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등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혁신당 전대 후보들 “전북 정치 바꾸겠다”

“도민 뜻 잊지 않고 내란 극복 · 정치 개혁 향해 나아갈 것”

조국 당대표 후보, 도민 중심 민생 정치 전환 의지 피력

내란 세력 척결 · 지방정치 바로잡기 · 전북 성장 등 제시

“지선서 전복을 전국 정당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 도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혁신과 비전을 직접 알리기 위해 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3시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신장식·정춘생 국회의원,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조위원장이 출마해 정전을 발표했다.

당대표 후보인 조국 전 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전북은 우리 혁신당의 정치적 뿌리다. 전북도민들께서 저희를 낳아주셨고, 우리는 그 뜻과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부족함이 있지만 한순간도 도민의 뜻을 잊지 않고 내란 극복과 정치 개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전북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새로운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며 “조국혁신당이 전북 정치를 바꾸는 메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 도민에게 세 가지 핵심 약속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와 의회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국유 세력’ 등을 척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일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등을 피해 현정을 파괴하는데 동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발판으로 국민의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광훈과 손을 잡겠다는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을 볼 때, 이들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정치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약속은 무투표 당선 등 민주적 견제를 끌어올리고, 도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 발전 전략이다.

조 전 위원장은 “2021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고, 전북은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3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경쟁과 책임을 상실한 권력의 독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장수군 군수의 사저 건립 비위, 정읍시 시의원들의 주민지원기금 유용 의혹 등 구체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약속은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도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 발전 전략이다.

조 전 위원장은 “재만금 메가시티, 조선·미래 상용차 산업, 자율주행 시험 평가 단지 구축,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와 그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핵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 마련에도 앞장서겠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도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담도의회에서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전북도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전국 정당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전북은 단순한 정치적 고향이 아니라 혁신과 민생을 실현할 실험의 장”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구태 정치를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로 바꾸고, 모든 전북도민이 행복과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3일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며 당 혁신의 구체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민들은 이번 전북 기자회견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전북 정치 개혁 의지를 주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전북 도민을 향한 세 가지 약속이 실제 정책과 정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치 혁신”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성운 의원 “전주역

KTX 운행 횟수 확대 절실”

전라선 KTX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지난 14일 오후 전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전주역에 오는 KTX 운행 횟수 확대가 지역 주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강하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선은 주중 36회, 주말 40회가 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전라선 KTX 이용률이 112%에 달하는 만큼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X는 지역과 수도권 간의 벽을 허무는 교통 인프라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기반”이라며 “전북과 전주의 회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바로 KTX 증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박희승 의원, 남원

방법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난 15일 남원시에서 열린 ‘방법가족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법대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남원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늘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자율방범대와 방법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무척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그 기초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방법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이재 도의원, 행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7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 지역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신보는 재가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재가지원 종합평가에서 신보는 매년 10위권 이하에 머물며 사실상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부 지표별 성적 역시 참담하다. 재가교육·컨설팅 부문 전국 9



위에, 재가보증지원 14위로 특히 저조하며, 극히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재가교육·컨설팅 실적(6시간 이상 교육)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한 건

에 대한 이행 실적만 있을 뿐 신보가 직접 기획한 사업 실적은 ‘전무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채도전·재창업 특례보증 공급액 또한 신규보증 대비 1.8%에 불과해 전국 14위라는 초라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논란’

임종명 도의원, 문제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7일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비판했다.

도시민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북자치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했고,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8개소가 지정되어 2023년~2025년 동안 사무장 인건비로 4억 5,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어촌체험마을을 확인한 결과 운영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사진)가 17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의 진행과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남원시 고립·은둔형년 지원에 관한 조



임 의원이 확인한 결과, 8개소의 운영 현황은 겨울철 미운영 3곳, 주 2~3회 운영 3곳, 연락 불가 1곳, 휴업 중 1곳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겨울철 동안 체험 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인건비는 꾸준히 지급되어, 실제 운영 일수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임 의원은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무장으로 채용될 경우 어업과 농업을 겸직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원사업의 하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만호 기자



례안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5건과 시장 제출 29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영태 의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